중소기업 특허 악의적 탈취시 3배 배상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 확정

앞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악의적 특허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또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기술자료라도 탈취하는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돼 민사책임을 물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현재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키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손해배상 및 처벌강화, 해외 지재권 보호지원, 사회적 약자보호 인프라 강화라는 3가지 전략으로 이번 방안은 추진된다"고 소개했다.

▲ 손해배상 및 처벌 대폭 강화, 최대 3대 손해배상

특허청에 따르면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영업비밀침해시 벌금 상한액이 현재의 10배로 상향조정된다.

또 지식재산 소송 중 중소·벤처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인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특허침해자가 특허 실시형태를 제시토록 하고 특허법에 반영된 소송시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경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법령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나 사용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하며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이더라도 목적에 반해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민사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 영업상의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는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할 것"이라며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 직권으로 조사·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하고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능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 해외분쟁 대응 손쉽게, 수출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현재 8개국 14개소에 조성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점차 확대해 2022년까지 16개국 22개소로 넓히기로 했다.

특히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K-브랜드 도용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피해 기업에 즉각 통보하고 상표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 불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K-브랜드 도용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무단 선점 상표피해 정보제공 사이트'를 구축, 연말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중국과는 특허공동심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익변리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 보호

특허청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학생 등은 왕성한 지식재산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익보호에 취약한 약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 지재권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특허 유지 기간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중재센터를 설립해 조정 위원을 대규모로 확보, 1인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토록해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분쟁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며 공익변리사의 직접 대리 서비스 확대, 지식재산 전문가 재능나눔, 지식재산 인식전환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성윤모 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돼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하림' 산업평화대상 수상

전주 르윈호텔에서 시상… 일자리 창출 등 기여 평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일자리 창출과 선진 노사문화 구축으로 산업평화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 르윈호텔에서 ㈜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라북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대상' 시상식에서 ㈜하림이 상을 수상했다.

㈜하림은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노사협력 사업추진,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산업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년 2회에 걸쳐 임직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노사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노사협력 발전을 위한 역량교육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노사갈등 없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림은 윤리경영 도입을 통해 기업의 윤리가치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내 거주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함께 도선 전집 지원, 청소년문화 탐방, 생태 보존 활동을 위한 피오봉사단 운영, 어려운 이웃 물품 지원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문용 총괄사장은 "(주)하림이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선진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과 함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청년·고령층 월세 비중 확대 현상 두드러지게 나타나

월소득 100만원 이하… 높은 주거비 부담

전세에 비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월세 거주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청년층(30세 미만)과 고령층(60세 이상)에서 월세 비중 확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거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만혼이 늘어 저출산이 심화되고,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층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포커스'에 따르면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의 축소와 월세비중의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청년이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2014년 74%에서 2016년 79%로 5% 포인트 확대됐고 고령층의 경우 이 비중이 56%에서 63%로 7%포인트 확대됐다"고 전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대부분 임차인은 전세보다는 월세 살이를 하고 있으며 월세 거주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송 연구위원은 "월세 거주 청년층의 43%와 월세 거주 고령층의 59%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월소득은 100만원 이하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 청년층의 소득분포에 비해서도 더 열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이 전세 거주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세 주거비부담은 22.0%로 나타난데 비해 월세 주거비부담은 32.1%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은 경상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월세 비중이 확대돼 높은 주거비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서는 전세와 월세는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도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의 주요 주택유형은 44.4%를 차지하는 아파트다. 반면 월세는 원룸 등을 포함한 다가구단독주택이 52.6%로 가장 주된 유형이다.

보고서는 "집 구조물, 방수, 난방, 환기, 채광, 방음, 안전, 방범 등 9개 항목에 관한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의 점수는 평균 3.3으로 조금 양호한 단계 이상이고 다가구단독주택의 점수는 평균 2.7로 조금 불량한 단계 이하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청년층의 만혼이 증가해 저출산이 심화되고, 최하위 소득 고령층의 생계위협이 심화될 수 있다고 송 연구위원은 지적한다.

송 연구위원은 "전세중심의 임대주택이 저출산을 고착화하고 청년의 만혼현상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한 뒤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 보증부월세로 원활히 전환되거나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소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소득 수준에 맞는 월세에 거주하면서도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세에 여유로운 임대소득과세를 균형있게 개편하고, 뉴스테이사업을 기존 재고 아파트 임대물량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민금융 진흥원 등의 주거지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구분없이 적용되는 일부 임대정책을 주거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강우용 전 공공구매정보센터장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임명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에 강우용 전 공공구매정보센터장이 임명됐다.

20일 전북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강우용 신임 본부장은 오는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 신임 본부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익산 원광고와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했다.

입사 뒤 조사연구부, 공제계획팀 과장, 전북지역본부 차장, 관로지원부 공공구매센터장을 역임했다.

강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중소기업계와 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